

반성폭력 학칙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그전에 대책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성폭력에 대한 지각없는, 비민주적인 대책위 운영을 규탄한다!

김중기 교학부총장은 책임 지고 성폭력 대책위원장직을 사퇴하라!

지난 15대 총여학생회에 이어, 제 16대 총여학생회는 반성폭력 학칙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은 너무나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인식은 2000년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온 4년 간, 학칙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면서 학칙의 허술함을 여실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앞의 자보에서 설명한 많은 구체적인 개정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학칙개정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칙개정이 다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가요?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된 학칙을 운영하는 주체인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런 어이없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물론 이 교수가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 물고 늘어지면 교수들이 사기가 저하 되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나. 이번은 기본적으로 교육자이니 교육자의 자존심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지.

교수위원1: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미안하다는 표시는 하고 있으니 이 정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네요

학생위원: 하지만, 분명히 그 교수님의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낀 학생이 존재합니다. 또 그 이후 교수님이 수업에서 그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소한 일에 예민한 학생들 때문에 무서워서 수업을 못하겠다”는 등, 신고인을 궁지로 모는 발언으로 2차 가해도 가했지만,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사건에 대한 사과문만 하더라도 교수님이 자성의 내용을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상담실에서 작성한 내용을 ‘수락’하는 형식이었으니 정말 반성하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써 문제제기한 피해자가 수업에서 위축되는 처지와, 그 발언으로 인한 불쾌감의 기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더 강력한 사과가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학생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의 사과문도 훌륭하지. 그리고 그렇게 원칙만 강조하면서 일을 해서야 어디 처리되는 일이 있겠나. 그리고 사실 교수가 수업시간에 농담 좀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문제제기하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지. 물론 잘 한 거라곤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일일이 성폭력이네 뭐네 하면서 학교 시끄럽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이번 사건은 그냥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 봐야 하니 그만 회의를 마쳐야겠네

위 에피소드의 대사들은 물론 가상으로 꾸며진 것입니다. 그러나 허구는 아닙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열렸던 연세대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는 말 풍선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말만 조금 다를 뿐, 위와 같은 상황이 번번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위의 예에서도 단적으로 보여지듯이 현재 성폭력 대책위의 위원들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의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가 된 몇 가지 발언들이 있지요.

‘방학이면 교환학생 온 여자들이 벗고 다녀서 걱정이다(웃음)’

‘남자에 집에 따라간 여자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들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모인 대책위의 테이블에서 위원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반성폭력 학칙에는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 보호’ 원칙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대책위원들이라 보니, 그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의지와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제출한 학칙 개정안에 원칙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침으로라도 지키게 하는 수밖에..’인 상황인 것이지요.

현행 학칙에 원칙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민주적인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원칙은 현행 학칙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학급회의 시간에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에 열렸던 몇 차례의 성폭력 대책위에서는 단 한번도 의결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항상 상황은 종료되곤 했지요.

물론 학생위원들은 대책위 테이블에서의 교수위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부족,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개탄하고 지적하려 합니다. 그러나 학생위원과 교수위원은 동등한 대책위원의 자격을 학칙 상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위원들은 교수-학생 간 권력 관계 속에서 학생위원들을 대합니다. 학생위원들의 말은 ‘아직 뭘 잘 모르는 학생의 말’ 정도로 치부되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태도는 그 누구에게서 보다 현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기 교학부총장에게서 가장 단적으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이해하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장은 ‘바쁘다’며 회의를 중단 시키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끝낼 때도 정회에 필요한 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의 대책위라면 과연 학칙을 제대로 개정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령 학칙을 개정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개정안을 제대로 지킬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대책 위원들부터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 민주적 의사 결정원칙을 지킬 것을 명시하는 내용, 학생위원의 동등한 의결권을 보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런 명시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책위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내용을 학칙 개정안으로 통과시킨다 한들, 어차피 지키지 않으면 상황은 마찬가지로 될 텐데요.

원칙적으로 생각해보면,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총장 직선의 요구가 당연하듯이, 대책위원들 인사에도 학생이 의결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상담기관의 자문과 검토가 대책 위원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대책위원회는 대부분 '당연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교학부총장이 대책위원장을, 그리고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 교학처장이 대책위원을 맡게 되어 있어, 애초에 총장 선거 이후 총장이 실처장들을 임명할 때에 대책위원회 구성이 이미 결정되는 체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이든, 가해가 징계에 관한 것이든 대책위원회의 결정이 학내 행정에서 실효를 발휘하려면 실제 학내 행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처장들이 대책위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현재 연세대 학사행정의 현주소이니깐요.

그렇다면.. 총장 직선과 더불어 실처장들을 임명할 때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져야,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학생들의 요구는 학교 측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요구가 되겠지요.

원칙적인 입장은 있지만, 운동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사건이 신고 되면 성폭력 사건은 대책위에서 논의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걸려있습니다. 대책위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원칙적이되 현실적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상황이 '시급히' 바뀌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여학생회는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을 제안합니다. 대책위원 인사에 있어 직접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책위원들을 각성시키는 방법은 학생들이 성폭력 대책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없는,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제대로 운영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말입니다. 물론 대책 위원들의 물지각한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감시와 분노가 대책 위원장 사퇴라는 단발적인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대책위원장을 사퇴시킴으로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도, 이후 4월에 총장 선거가 진행된 후 새로운 실처장 단이 구성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대책위가 구성되어 또 다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인다면 대책위원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탄과 경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인 김중기 교학부총장은 성폭력에 대한 지각없는, 비민주적인 대책위 운영에 책임지고 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